

2018

Report

of Trend

2018

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

규제완화 정책

동향보고

2018.05. part2 제 98 호

# Contents

## I . 정부 추진동향

- 1. 청년은 수도권에 창업해도 법인세 5년 간 절반 깎아준다 3
- 2. 정부, 혁신성장 길도는 '규제 개혁'에 발목 '잡히나' 4
- 3. 이헌승 의원 : 유명무실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개선 5

## III . 비수도권 ( 지역 ) 추진동향

- 1. 수도권 위주 발전전략을 동서발전축으로 6
- 2. 수도권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 심화 ... 양도세 중과세 매매 심리 위축 7
- 3. 지역 균형발전 위해선 '대학 연계형 도시발전 모델' 만들어야 8

## 1. 청년은 수도권에 창업해도 법인세 5년 간 절반 깎아준다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5.17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Chosun.com

## 02

## 주요내용

■ **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만 15~34 세 청년이 서울, 경기 등 수도권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 간 법인세 50% 를 깎아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**

- 기재위는 17 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한 청년에 대한 세금 감면을 늘리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
- 청년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해도 법인세를 5년 간 50% 깎아주는 내의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
- 현행 법에선 청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세를 깎아주지만,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하면 혜택 없음
  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, 경기도 인천 부천 과천 등 13 개 시다. 창업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함
- 당초 정부는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도 하더라도 5년 간 법인세를 100% 깎아주려고 했지만 조세소위,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%, 그 외 지역은 100% 로 정해짐
  - 혜택을 받는 청년의 연령은 현재 만 15~29 세에서 만 15~34 세로 확대
  - 적용기한은 2021 년
- 기재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~34 세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70% 에서 90% 로 인상하고 기간도 3 년에서 5 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통과
  - 적용연령은 최고 만 29 세에서 만 34 세
  - 일몰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1 년 말까지로 연장
  - 감면한도는 연간 150 만원

## 2. 정부, 혁신성장 길도는 '규제 개혁'에 발목 잡히나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5.17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파이낸셜뉴스

## 02

## 주요내용

### ■ 정부가 미래 먹거리 모색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성장 길도는 규제 개혁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제기

- 지난해 11월 닷이 오른 후 6개월여만에 벤처 투자가 늘어나는 등 나름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혁신 성장의 핵심인 규제샌드박스의 국회 논의는 진척 없이 표류 중
- 여기에 신산업과 기존 업계간 공유경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혁신 성장의 원동력 저하까지 우려
-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, 주요 과제별 추진 과제를 명확히 설정, 예산·세제 지원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음
- 공유경제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론화 플랫폼을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
- 길도는 '규제 개혁'... 원동력 저하 우려
- 혁신 성장 6개월... 혁신 창업·벤처 투자 증가세
  - 정부는 17일 서울 강서구의 마곡 R&D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'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'를 개최
  -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첫 혁신성장 전략 회의를 주재한 지 6개월여 만
  - 이날 4대 혁신분야,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·평가하고,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
  - 지난 1월 혁신 창업 관련 신설 법인 수가 처음 (월 기준)으로 1만개를 돌파
  - 올해 1·4 분의 신설 법인 수는 전년동기 대비 5.1% 증가
  - 벤처 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는 사상 최고액인 2조 4000억원 (1266개사 투자)을 기록
  - 지난 1월 16일 기준 코스닥 지수도 16년만에 900p를 돌파했고, 카페 24 등 13개 사가 테슬라 요건 1호에 신규로 상장
  - 구매 보조금 확대, 규제 개선 등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수요도 2배 이상 늘었음
  - 신재생 에너지 보급 실적도 올해 1·4분기 1186MW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늘었음
  - 인공지능, 핀테크 등 신서비스 출시도 활발
- 반면 혁신 성장의 핵심인 규제 개혁은 별다른 진척 없이 걸돌고 있음
  - 대표적인 것인 규제 샌드박스
  -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산업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이 규제 및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·면제 받게돼 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됨
- 하지만 여야간 갈등으로 표류가 장기화될 조짐
  -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'규제프리존특별법'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
  - 규제 샌드박스의 4대 법안은 정보통신기술 (ICT) 특별법·산업융합촉진법·금융혁신지원특별법·지역특구법 등
-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하는 공유 경제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
  - 우버 (스마트폰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), 에어비앤비 (숙박 공유 플랫폼)에 이어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연결해주는 '카풀업' 논란이 뜨거움
  - 카풀업 업체가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도 영업을 하자 택시업계 등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반발
- 신산업과 기존 업계 등 이해 당사자간 갈등 요인이 크다보니 정부도 선불리 규제 개혁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모습

## 3. 이현승 의원 : 유명무실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개선

## 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5.29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데일리환경

## 02

주요내용

■ 지난 28 일 ‘수도권 정비계획법’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…총허용량 산출근거 공개

- 앞으로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 총허용량 산출근거가 공개될 전망
-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최근 대표 발의한 ‘수도권정비계획법’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음
-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토록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해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
- 하지만 정부가 총허용량 산정 과정에서 비공개로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제출받고 대부분 총허용량에 반영해준 것으로 나타나 총허용량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
  - 이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만 24 km<sup>2</sup> 증가, 이는 여의도 면적 (8.4 km<sup>2</sup>) 의 2.86 배 크기
- 이현승 의원
  -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
  - 앞으로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 총허용량의 산출 근거가 공개되면 국민의 감시 속에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자제될 수 있을 것

## 1. 수도권 위주 발전전략을 동서발전축으로

## 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5.15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전북일보

## 02

주요내용

■ 전북연구원 ‘지방 중심의 국토발전 축 대전환, 전라북도가 선도하자’ 란 제목의 연구과제를 발표

-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발전 축을 과감하게 바꿔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를 강화해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
-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기존 발전축인 경부축은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이고, 이는 국가발전의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
  - 이런 발전축 때문에 전국의 물류가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리고,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
  - 전북 등 비수도권은 저성장 늪에 빠져 희생하기 힘든 처지에 놓였고,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이탈과 저출산, 고령화 등 문제가 심각, ‘지방소멸’ 위기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
- 전북은 일찍이 이런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
  - 경북 등 주변 지자체들과 협력해 대구 ~ 무주고속도로 건설, 김천 ~ 전주 철도 건설 등 동부 영남지역 등과의 교류 확대 정책을 진행
  -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동부권과 연계하는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 강화, 그리고 최근에는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서해안 고속화 철도 (새만금 ~ 목포) 건설도 제시
  - 문화관광 부문에서도 초광역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, 가야역사문화권, 백두대간 산림치유, 전북·충북·경북의 삼북문화권 등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
- 하지만 그간 추진 사업들의 진행 과정을 되짚어보면 전북과 경북 등 지자체간 접촉을 통한 사업은 추진력과 확장성이 부족
  - 전북이 과거부터 대중국 중심 교역기지로 부상하기 위해 몸부림쳐 왔지만 전북이 그려온 동서발전축은 현실화된 것이 전무할 정도
  - 모두 정부 발전정책에서 밀렸기 때문
- 문재인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아짐
- 그동안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합심해 주장해 온 수도권 중심정책 타개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동서간 국가균형발전축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

## 2. 수도권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 심화 ... 양도세 종과세 매매 심리 위축

### 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5.23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일요주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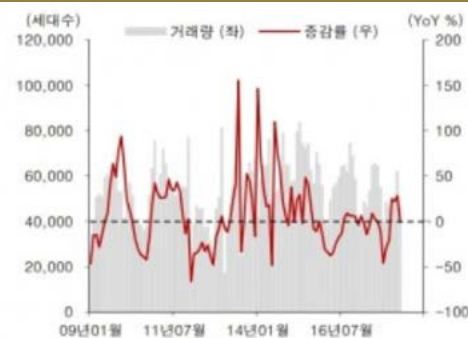
### 02

주요내용

#### ■ 정부의 양도세 종과세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이후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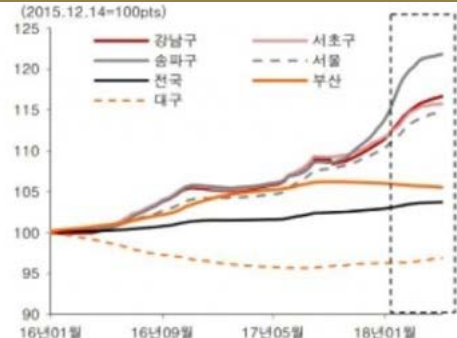
- 김세련 SK 증권 연구원은 23 일 부동산 양극화의 시그널들이라는 제목의 부동산 관련 리포트
- 지난달 부동산 거래량은 4 만 6368 세대로 전년동기대비 0.9% 감소해 전월대비 25.3% 감소
- 올해 1 분기 높은 입주 물량 집중에 따른 이사수요 증가 등으로 높았던 기저로 인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
- 지난달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에 따른 매매 심리 위축으로 거래 절벽이 나타난 것
- 전국 부동산 가격 지수는 상승률 자체의 둔화가 있을 뿐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이나 사실상 지수를 구성하는 비중이 서울 수도권이 압도적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

4 월 부동산 거래량, 전월대비 25.3% 감소



자료 : 국토교통부, SK 증권

이미 지방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한지 오래



자료 : kb 부동산 SK 증권

- 지방의 경우 조선, 자동차 등 지역 거점 산업의 생산 둔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며, 따라서 거래량 절벽 역시 서울, 수도권 위주의 입주 거래가 사라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거래량은 더욱 침체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음
- 김세련 SK 증권 연구원
  - 부동산 매크로는 둔화됐지만 올해 입주 사이클 도래로 이익 확대가 나타난 지방 중소형 건설주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아진 상황
  - 그러나 보유세 증세 등의 카드가 여전히 남아있어 지방 부동산 매크로가 개선될 여지가 높지 않다고 전망

### 3. 지역 균형발전 위해선 '대학 연계형 도시발전 모델' 만들어야

## 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5.27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머니투데이

## 02

주요내용

#### 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'대학 연계형 도시발전 모델' 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

- 교육부는 오는 28 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·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주최하는 '지역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' 라는 주제의 3 차 당·정 정책토론회
-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: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발제문
  -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대학의 역할이 중요
  - 대학 연계형 도시발전 모델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혁신도시 내 공동캠퍼스 설치, 오픈캠퍼스 운영 등 협력 방안을 모색
  -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그간 10 개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153 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공공기관·지자체·대학·기업 등 지역혁신주체간 협력순환이 형성되지 못함
  - 교육·문화·여가 등 생활환경도 여전히 미흡해 내생적 발전동력을 확보하지 못함
  -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성장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확대
  -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도시발전 목표설정
  - 공공기관·대학 등 지역주체 간 연계 강화
  - 주요 혁신성장 거점 연계 국가 혁신거점 발전전략 수립
  - 혁신도시 추진체계 정비 및 재원확충 방안
- 이번 토론회에서는 '지역사회 안전망 확충과 직업교육·훈련 활성화 방안' 에 대한 토론도 이어짐
- 발제자로 나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
  - 지역 산업 구조조정과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8 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직업훈련비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단기 처방 만으로는 한계
  - 대체산업과 직업교육·훈련 사업 간 체계적 연계 등 중장기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
  - 고용위기 지역은 군산·거제·통영·고성·진해·울산동구·영암·목포 등
  - 용위기 지역은 직업훈련·교육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 대학의 고급 인력양성 체제와 결합한 숙련훈련이 절실
  - 대학 내 장기 직업교육·훈련 과정 개설,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, 대학참여 지역 고용 거버넌스 구축 등 직업훈련·교육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
- 이번 토론회 토론자로는 이기원 한림대 교수와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, 이계철 군장대 부총장, 박경훈 창원대 산학협력단장,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